

최상목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尹 선고 후 표결 가능성

마은혁 재판관 미입명, 국회 권한 침해...민주당 등 야권 188명 참여 24시간 후 72시간내 표결하거나 법사위서 청문회...시점은 유동적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탄핵”은 경제 테러이며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최 부총리 탄핵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소속 의원 187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총 188명의 참여로 지난달 21일 발의됐다.

이날 탄핵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당시 권한대행이던 최 부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이 탄핵소추 사유다.

최 부총리가 12·3 비상계엄 당시 지시 문건을 받는 등 내란 공범 혐의를 받는다는 점, 마은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임명을 의뢰하지 않은 점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거나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해 청문회 등의 조사 과정을 거친다.

최 부총리 탄핵안 표결 시점은 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있는 만큼 유동적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최 부총리 탄핵안을 금명간 법사위로 회부해두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후 표결을 추진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등이 발의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는 것과 관련해 “(탄핵안을) 지금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최 부총리는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도 아니고, 이를 뒤에는 대통령 탄핵 선고가 내려진다. 그런데도 (최 부총리를) 탄핵하겠다는 것은 실의 없는 분풀이식 보복이고, 다수당의 폭거”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밖으로는 AI(인공지능) 전쟁, 관세 전쟁이 긴박하게 벌어지고 있고, 안으로는 민생 경제 상황이 엄중한 이 중대한 시기에 경제부총리를 탄핵하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탄핵이자 테러”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파면이 안 될 경우 ‘유혈 사태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공공연하게 테러를 사주하고 있다”며 “대통령

탄핵 선고 앞두고 민주당의 집단광기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오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선 “입법권을 헌법 파괴의 흉기로 쓰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당 소속 의원들에게 “현재에서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일 뿐”이라며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치열한 싸움을 한시도 멈출 수 없다. 국민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를 다하자”고 당부했다.

그는 이 발언과 관련해 의총 후 기자들에게 “(현재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을 예상해서 한 말은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계속해서 현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얘기를 안 하고 기각될 경우에 대비해 폭동 테러를 사주하는 상황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보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각오를 다지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현재 결정 승복 메시지를 건의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 결정에 승복하는 게 대한민국 헌법 질서”라며 “당연한 것이라 미리 (승복 메시지를) 내라, 내지 말라고 당사자에게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승목 의사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어업 피해 보상

서삼석·주철현 의원 대표발의 농어업·해양 현안법 본회의 통과

민물가마우지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어업피해도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안 등 농어업·해양 현안 법안이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의 노력 덕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농업재해의 범위에 고라니와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인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어업재해는 이상조류, 적조현상, 태풍, 이상 고온 등의 자연재해에 한정하면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어업피해는 보상 근거가 부재했다.

이로 인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어가는 263곳으로 피해액도 32억원에 달하지만 이를 보상할 근거가 없어 어민들이 수산양식물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개정안은 어업재해의 범위에 조류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포함해 농어업 간 재해보상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어민들이 어업 피해를 보상받을 근거가 마련되면서 수산양식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그동안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어가가

보험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재해보상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현행 규정도 개선했다. 재해보상금을 받은 농어가도 지원금 차액의 범위에서 정책자금 상환기한 연기, 이차역 감면 등의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종보상 및 중복지원 금지 조건을 명확히 하면서 농어민의 생계 안정과 경영 유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주철현(여수갑)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은 수산물 관련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두 개정안은 각각 수산업 인력 육성과 수중레저 활동 안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은 기존의 수산업 관련 훈련 대상 요건을 완화하여, 수산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장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도 포함하도록 했다. 이는 어촌의 신규 인력 유입을 촉진하는 등 어촌 발전을 이루기 위한 조치이다.

수중레저법 개정안은 기존에 해양수산부가 담당하던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관리 업무를 해양경찰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중레저와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관리 기관을 일원화하여 국민들에게 혼선을 줄이고,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도의회 민주·진보·정의당

“尹, 8대 0 만장일치 파면”

전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정의당 소속 의원들은 2일 “오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남도의회 내 3당은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소가 8대 0 만장일치로 탄핵소추안을 인용해 국민의 피와 땀으로 쟁취한 민주주의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린 윤석열 대통령의 직을 박탈하고, 그 권한을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며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과 신임을 저버리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도의회 3당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해 헌정질서의 원칙을 국민 앞에 분명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내란 앞에 침묵은 곧 방조”라며 “12·3 비상계엄 사태로 분열된 대한민국이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정의로운 결정을 계기로 갈등과 대립을 멈추고, 다시 하나의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이복현 “사의 표했지만 한 대행이 만류”

“금감원장직 걸고 상법개정안 거부권 반대” 입장 해명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에 사의를 표명했지만 만류가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미국 상호관세 발표나 홀플러스 사태 등 경제·금융 현안들이 산적해 거취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직을 걸고 거부권 행사에 반대한다”는 설부터 발언으로 시장 혼란만 부추겠다는 비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금감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금융위원장께 연락을 드려서 제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주주까지 제고와 관련된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면서 상법 개정안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는 “금융위원장에 말씀드렸더니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연락을 주셔서 지금 시장 상황이 너무 어려운데 경거망동하면 안 된다고 자꾸 말리셨다”며 “저도 공직자고 뱉어놓은 말이 있다고 말했더니, 내일 아침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에서 보자고들 하셨다”고 말했다.

그는 재의요구권 행사 직전인 지난달 28일 F4 회의에 돌연 불참하면서 상법 개정안 관련 논의 방향에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는 해석을 낳았다.

그러면서 “마침 오늘 밤 미국 상호관세 발표 등이 있어 환율 등 문제가 있을지 봐야하고, 시장 관리 메시지가든가 대응 방안을 논의할 텐데, 그때 조금 더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일단 사의를 표명했지만, 거취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칼라강판 지붕공사

건물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옥상스틸방수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